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영유아·가족 지원 정책¹⁾

출판홍보팀

1. 들어가며

국정과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국가운영 핵심 과제로, 국가 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설정된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실행계획이다. 정책 설계, 집행, 평가 등 국정 관리 전반의 기준이 되어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장치로, 국정과제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본적 삶의 조건 보장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을 국가 정책의 목표와 성과의 중심에 둔다. 국정운영의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며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 세계를 이끄는 핵심경제,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있다. 국정목표 아래에는 23개의 추진전략이 있고, 각

전략에 해당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있다.

이 중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속하며, 인구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복합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과제 87: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과제 88: 성평등가족부),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과제 95),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과제 101)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사회 변동에 대응하여, 단순한 출산장려 차원을 넘어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생애 초기 건강과 돌봄, 보호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을 위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본 과제는 임신과

1) 이 글은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출산부터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가. 생애초기 국가책임 강화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가 임신·출산의 높은 비용과 건강상의 취약성, 그리고 부모의 육아 부담임을 고려할 때, 생애초기 국가책임 강화는 출산과 영유아기, 아동기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임신 전(全)과정에 대한 건강지원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가임력 검사비 상시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의료지원,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임신·출산 위험을 낮추어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다.

또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²⁾과 미숙아 지속 관리³⁾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애 초기에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건강·발달 격차 해소와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영유아 양육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당초 공약은 18세까지 확대였으나 변경되었다. 2017년생 아동부터 확대 대상이며, 1인당 총

6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 확대는 공약의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하나로 제시되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양육지원 강화의 정책 틀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동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과 양육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요구가 절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부모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양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3. (과제 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88번 국정과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영유아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① 아이돌봄 지원 확대, ② 한부모, 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가. 아이돌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돌봄 지원이 어린 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중심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왔으며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원 금액을 달리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돌보미 처우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 상향하여 이용자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2)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신·출산 이후의 초기 2년 동안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영아발달 상담 및 양육교육, 심리 및 사회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5).

3) 미숙아 지속 관리 사업은 1500g 미만 혹은 32주 미만 조산아를 대상으로 교정월령 4, 8, 18, 24, 36개월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기, 비정기 상담을 통해 추적관리하는 사업임(이른둥이지속관리사업단 홈페이지(<https://babyhealth.kr/>))에서 2025. 9. 10. 인출).

4) 유해미(2025).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진단과 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아정책포럼 제84호, 육아정책연구소.

특히 취학 전·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차등지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긴급돌봄을 신설하여 긴급한 돌봄 수요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보미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돌봄수당을 인상하여 보다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고 돌보미의 안정적 일자리 환경 개선 과제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베이비시터, 돌봄인력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운영하여 민간 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적 서비스 확충 및 관리 강화 외에도 정부의 관리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혼모, 미혼부, 조손가족 등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구조적 취약성과 양육환경의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미혼모와 미혼부, 조손가족의 양육 부담이 구조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을 지원하고 진로설계 등의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이주배경 아동의 학업 격차와 적응 문제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책임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95번 국정과제는 노동부가 주관하며, 영유아 가족 지원과 관련한 세부과제로는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 균형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을 제정, 시행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5일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장시간의 근로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포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근로자의 양육시간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육아와 돌봄 지원을 전적으로 기관이나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간의 기관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발달상의 문제와 사교육 시장의 의존 문제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시간 운영에 따른 교직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악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자의 근무 부담 완화에서 나아가 가정의 돌봄 기능 회복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직접적인 가족친화제도 정비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이 육아기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구조를 재편하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기반 조성 정책이라면, 가족친화제도 정비는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의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표적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 전체의 시간 구조 개선'이라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면, 가족친화제도는 그 기반 위에서 육아기 등 특정 시기의 부모가 실제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정과제에는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설하여 배우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난임 유급휴가 확대는 실제 출산을 원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뿐 아닐, 임신, 출산 전 단계에서의 부모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은 사용상의 편의성을 높이며,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 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인프라인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역시 설치 부담과 운영비용 문제를 완화하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

급하는 등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의의가 크다.

5. (과제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101번 과제는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된다. 영유아교육과 보육 과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공교육 강화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된다. 또한 돌봄과 관련하여 방과후돌봄체계 구축이 포함되었는데,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 확산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지난 정부에서 부처 통합까지 추진되었던 유보통합 과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세부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우선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며, 틈새돌봄 확대와 수요 맞춤형 교육과 방과후 과정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제시한 유보통합 로드맵이 현장의 반발과 이해관계 충돌로 몇 차례 난관에 봉착하며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보다 영유아와 부모, 즉 이용자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장 적용 가능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용자 관점의 품질 개선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증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초등학생 대상 돌봄 기능이 그동안 늘봄학교의 단계적 확산을 통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101번 과제의 목표로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여, 지자체와의 연계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 확산하고 (가칭)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돌봄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돌봄 자원의 중복을 해소하고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프로그램, 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체제를 확립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가 담당하는 방과후·돌봄 기능에서 학교의 역할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교육 내용의 질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예상된다.

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산부터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에 이르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유아-아동-초등기-가족-노동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다.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정책은 국가의 책임 강화와 생애초기 및 가족지원 확대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와 재정 확보 등의 후속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반 여건 강화를 통해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6.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속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정책은 하나의 전략에 집중되지 않고 인구, 가족, 노동, 교육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는 공급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성하고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